

광양시,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최종 확정

2023년 1월 실무 추진단 구성·마스터플랜 수립 시작 광양읍·금호동·도이동 일원 중심 총 사업비 400억원

광양시는 지난 26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국토부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라남도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기업체와 함께 분야별 수소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의 수소 생태계가 구축돼 주거와 교통 분야 등에서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말한다.

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지난해 10월 광양 시민의 날을 맞아 '2050 수소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시민 앞에 선언했다.

올해 4월엔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12월엔 광양시 수

소산업 유지·육성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민과 기업체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광양시에서 2023년부터 추진할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주거 분야는 광양읍에 들어서는 청년 행복주택과 생활동 다목적 스포츠센터(수영장)에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 공급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출퇴근 버스, 청소차 등을 연차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발전소 및 광양항에 공급하기 위해 19km 수소배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수소도시 조성사업 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운영센터, 시민에게 수소에너지를 체험하고 안전성에 대해 홍보할 홍보센터를 구축한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항만 내 야드 트랙터



와 항만 내 감시 기능을 하게 될 드론을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광양읍, 금호동, 도이동 일원을 중심으로 2023~2026년(4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400억 원(국비 200억, 도비·시비 200억)이다.

광양시는 내년 1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무 추진단 구성, 마스터플

랜(MP)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오희 에너지관리팀장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여수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맞이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카드형(섬섬여수페이)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류형은 1월 13일부터 각각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설맞이 특별할인 목표액은 총 200억 원으로, 카드형(섬섬여수페이)이 80억 원, 지류형이 120억 원이다. 목표액 소진 시 특별할인은 마감된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산해 월 50만원이며,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 법인은 현행대로 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2% 할인을 받게 된다.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은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chak(착)" 앱과 대령 운영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49개소에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카드형은 가맹점에서 사용 시 충전액이 우선 소진되며, 충전액을 초과했거나 미가맹점 또는 관외에서 사용할 경우 상품권 충전액이 아닌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에 전국 최초 '어선 건조지원센터' 들어선다

고흥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선건조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확보한 국비 400억원 등을 투입해 고흥 도양읍 일원에 조선소, 검사소,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어선건조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집적화된 친환경·고효율 어선 건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화재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어선건조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490억원(국비 400억·군비 90억)을 들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고흥 도양읍 일원에 어선 건조 진수를 위한 몰드 제작시설을 비롯해 트레일러, 크레인 등을 갖춘 계획이다.

지원센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소, 설계소, 연구소, 사각수조 등 기술지원시설도 구축한다.

고흥=기동재본부

보성군, 후계농업경영인·청년 창업형 후계농 대상자 모집

보성군은 2023년 1월 27일까지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197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책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 후계농은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했으며 영농정책지원금도 기존 월 80만 원~100만 원에서 월 90만 원~1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착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년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청년 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축산과 농정계(☎850-5384)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류순천' 수립

노동자 인권 증진 등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15개 세부과제 추진



순천시가 향후 5년간 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시는 26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류 순천'을 목표로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사전 대응하고, 기반 산업 노동자부터 취약 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됐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지역 노동환경의 특성과 현안, 노동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역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지역 산업 및 노동환경 실태분석, 노동정책 수요조사, 노사민정협의회 간담회, 노동계 간담회 등을 거쳐 비전과 세부 사업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사업과제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순천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 김경완 청양대학교 교수)의 심의를 거쳐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순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류 순천' 실현을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29억 원을 투입한다.

첫째,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분야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감정노동자 행복 지원 사업 ▲이주노동자 지원기능 강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 등 11개 세부과제에 3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분야에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 2개 세부 과제는 18억 원이 쓰인다.

마지막으로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분야는 ▲노사협력 파트너십 활동 지원 ▲노동정책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2개 세부과제에 3억 원이 투입된다.

순천=김승호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